지난해 이어 또 "국비보조 '매칭사업' 재정집행 줄줄이 연기

광주시·전남도·22개 시군 예산 6조 미집행 사태 왜?

정부는 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 체의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일상경 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지방재정 세입·세출기간(출납폐쇄기간)이 연말 로 앞당겨지면서 빚어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예산 이월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여비와 사무실 경 비 등을 소액으로 집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각 부서 가 경리계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단체 운 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비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 관·시설 유지·운영경비 중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 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다음해로 이월, 예 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듬해 1~2월에 집행할

하지만 이는 금고에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 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수가 줄면서 적기에 국비 지원이 안 돼 이들 시·도 가 추진중인 '매칭(matching)'사업, 즉 국고보조사 업의 시행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 이 월과 불용 처리, 사업 연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미집행 예산 은 본청 1조4589억원, 22개 시·군 4조2081억원 등 5 조667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집행률은 각각 79.39%, 6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0%와 1.4%가 증가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광주는 90%에 가까운 87.5%다. 이 같은 낮은 재정집행률은 자체 재원이 없는 전남도가 그

자체재원 부족 국비보조사업 많아 전남, 국고 7300억 적기지원 안돼

전남도비 800억원 못쓰고 이월

만큼 타 시·도에 비해 국비보조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다.

미집행액은 주로 국비보조사업비, 경상경비, 복 지비, 명시 이월 등으로 나뉜다.

전남도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비 는 모두 73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비 800억원도 쓰지 못하고 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356억 원)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224억원), 배수 개선(215억원), 밭기반 정비(209억원), 영산강강변 도로개설(178억원), 지방체육시설 건립(102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53억원), 관광지개발(47억 원), 전통시장 및 중소물류유통 기반조성(45억원) 등의 사업들이 멈춰있는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국비를 서둘러 내 려보낸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예 산 지원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며 "지난해부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어 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연말 전남개발공사 공채 600억원, 지역 개발기금 공채 원리금 700억원을 상환하면 재정 집 행률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왼쪽)·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일 국회 2회의장 회의실에서 예산결 예결위 간사들 "잘 해봅시다" 산특별위원회 증액심사소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노동5법 연계" 野 "누리예산 편성"

국회 예산안 처리 막바지 물밑 담판…1000억원 줄어들 듯

여야는 1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하 루 앞두고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담판에 들어갔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이지만, 여야 모두 예 산안을 '지렛대' 삼아 원하는 쟁점법안을 최대한 얻 어내려는 연계작전을 펼치고 있어 여야 지도부는 2 일 전까지 복잡한 수 싸움을 펼쳐야 한다. 특히 자 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세계수영선수권 대 회 개최 지원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도 새누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연계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각각 열어 협상전략을 마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개 최하기로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까지 취소하며 물밑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노동·민생법 합의 안하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새정치연합은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 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법안심사 잠정 중단을 선언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동5법'과 예산안 연계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협상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부 ·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간사 차원에서 막판 물밑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가 전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서 활동이 종료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 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 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 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가량 순감(純減)된 386조6000억원선이 될 전망이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여야의 수정 대안은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 새정치연합은 관련 예산 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은 국고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각 이 첨예한 분야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600억원이 TK(대 구·경북) 지역에 배분됐으며, 야당은 이를 'TK 특 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6년 01월 08일(금) ≈02월22일 패턴 : (2박3일) / (3박4일)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출발일 : 1월/07(목),08(금),10(일),11(월),13(수),14(목),16(토) 광주광역시동구 금납로5가 151-1번지 1층 17(일),18(월),19(화),22(금),23(토),24(일),25(월) 대표전화(062)234-3222팩스 (062)234-3141 2월/06(토),07(일),09(화),10(수),12(금),13(토),14(일) NAVER 조이투어 15(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 http//www.joytour.kr विश्व 조 여이기

성인/729,000원-팬션 어린이/699,000원 성인/769,000원-호텔 어린이/739,000원

4일 성인/899,000 억린익/849,000원 북큐슈/품격

경제법안 대치…연말 임시국회 불가피

선거구 획정까지 겹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물 건너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 지만 처리할 법률은 산적해 있어 연말 임시국회 소 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진통 끝에 가결하고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쟁점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논의 도 진척이 없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이미 물 건 너간 분위기여서 연말 임시국회 개최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 법안 및 선거 구 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 다. 그러나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쟁점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점에 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한 2일 본회의 이후 여야가 냉각기를 거치며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연말 임 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경제 민주화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야당의 입장과 충돌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일명 원샷법)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 다. 특히,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률안 을 내년 예산안과 연계하는 강수를 두며 연내 처리 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월 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협동조합을 지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4대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